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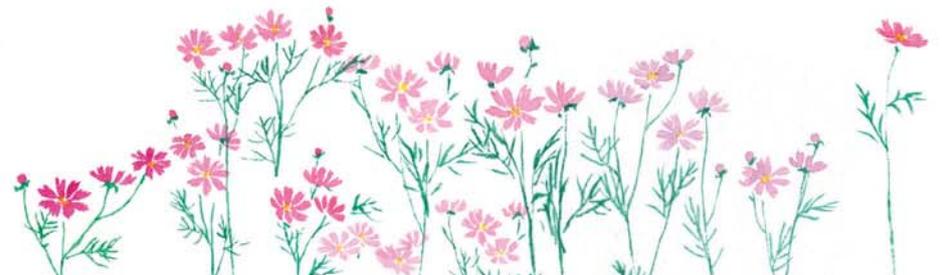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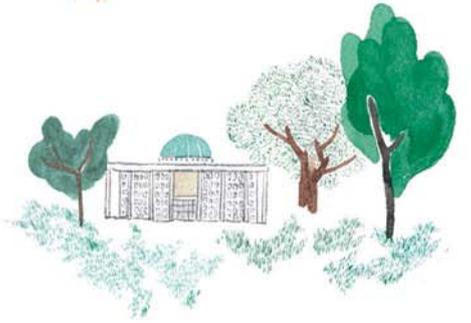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 국회보

SINCE 1949

vol.646, September 2020

# 09



# 국회보

## [표지이야기]

9월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이 진행됩니다.  
국민의 최선을 위해 달리는 국회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흘러가는 9월입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46, September 2020

##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인**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장대섭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04 지금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개회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민표 변호사 위촉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 “추가 확진자 없도록 상황 관리에 총력”

## 특집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08 국회운영위원회\_ 김태년 위원장

10 법제사법위원회\_ 윤호중 위원장

12 정부위원회\_ 윤관석 위원장

14 기획재정위원회\_ 윤후덕 위원장

16 교육위원회\_ 유기홍 위원장

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_ 박광온 위원장

20 외교통일위원회\_ 송영길 위원장

22 국방위원회\_ 민홍철 위원장

24 행정안전위원회\_ 서영교 위원장

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_ 도종환 위원장

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_ 이개호 위원장

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_ 이학영 위원장

32 보건복지위원회\_ 한정애 위원장

34 환경노동위원회\_ 송옥주 위원장

36 국토교통위원회\_ 진선미 위원장

38 여성가족위원회\_ 정춘숙 위원장



- 40 **인터뷰\_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듣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46 **길에서 길을 찾다\_ 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조선과 관광, 두 날개로 비상 꿈꾸다
- 50 **칭찬합시다\_ 전해철 위원장**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하여
- 52 **의원의 좌우명\_ 홍석준 의원**  
“공직경험과 노하우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일조하고파”
- 54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이수진 의원**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
- 56 **일하는 국회·공부하는 국회**  
농작물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62 **새 법률 소개**  
국회,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의결
- 67 **국회스케치**
- 68 **법률 시대를 읽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_ 천우정
- 70 **법 시행 그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72 **주재관 리포트**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 연방의회 운영현황 및 대응입법\_ 주성훈

- 74 **만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76 **위원회는 지금**  
국회, 집중호우 피해 점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열어
- 80 **국회 뉴스**
- 86 **국회 사람들**  
약사인 내가 국회에서 일하는 이유\_ 은세현
- 88 **경제이야기**  
왜 불경기에 주가가 더 오를까\_ 이진우
- 90 **청년에게 듣는다**  
내일의 나는 잘 살 수 있을까?\_ 김지윤
- 92 **과학을 읽다**  
불붙은 화성 탐사 경쟁\_ 고호관
- 94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윤두서 자화상’의 비밀\_ 이광표
- 97 **생활 속 우리말글**  
사이시옷(ㅅ) 적기의 요령\_ 김형주
- 98 **역사 속 길을 찾아**  
아차산에서 한강 광나루까지  
역사의 발자국을 찾아 걷다\_ 장태동
- 102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정기국회 개회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월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현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제21대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1일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

회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5명씩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2명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참여한다. 윤리특위 외에도 에너지특위 등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사무처가 보좌하는 '코로나 19 대응팀'을 만들어 국회 차원의 코로나 방역대책과 사후조치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민표 변호사 위촉



8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박민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8월 21일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민표 변호사(전 대검찰청 강력부장)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이 새롭게 위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재산증식이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

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의 청렴성, 더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19일 구성됐으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박민표 위원장과 윤한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우·서영득·이상갑·장윤미 변호사, 장인재 민주연

구원 자문위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정양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등 총 11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추가 확진자 없도록 상황 관리에 총력”

국회 재난대책본부 회의 개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가운데)이 8월 28일 열린 국회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8월 28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 19 상황을 점검했다.

재난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기간을 8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7일 실시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당국, 정당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각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함께, 9월 정기회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집

# 상임위원들에게 듣는다



제21대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	김태년 위원장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하는 국회와 검찰·사법 개혁 완수 .....	윤호중 위원장
성장에서 행복으로 국정운영 목표 전환해야 .....	윤관석 위원장
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한 재정정책 및 합리적 세제개편 추진 .....	윤후덕 위원장
일관된 교육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교육혁신 이룰 것 .....	유기홍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할 것 .....	박광은 위원장
외교 안보엔 여야 없어... 국익 지키기에 앞장서겠다 .....	송영길 위원장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 .....	민홍철 위원장
국민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 닦아드리는 위원회로 거듭날 것 .....	서영교 위원장
문화로 아름다운 삶, 체육으로 건강한 삶, 관광으로 침표 있는 삶 드릴 것 .....	도종환 위원장
대한민국 농어민의 꿈 실현하는 희망 사다리 될 것 .....	이개호 위원장
우리 산업이 위기를 넘어 기회로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	이학영 위원장
감염병 일상화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 .....	한정애 위원장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위원회... 국민 행복 우선시 할 것 .....	송옥주 위원장
작은 국토,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이용이 관건 .....	진선미 위원장
여성·가족·청소년 의제를 대전환기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으로 .....	정춘숙 위원장

## 제21대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대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제가 국민께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합의로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회가 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야가 정책과 법을 논의하는 시간보다 정쟁을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상임위, 본회의 등 회의 날짜를 잡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회의는 일정에 쫓겨서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변화 속도에 국회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 시대의 변화 선도하는 국회 돼야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는 여전히 인류의 숙제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급속도로 재편되고, 세계 각국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김태년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제21대국회 앞에 놓인 과제는 너무나도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 산업과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국회가 앞장서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책과 법을 결정하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회 고유의 기능인 숙의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 역할입니다. 숙의의 총량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합니다.

###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운영의 새로운 질서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등의 개정사항을 놓고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와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공유해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기차가 다니는 철로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철로를 잘 깔아야

기차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철로가 잘못 깔리면 기차가 탈선하기도 하고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국회가 일하지 못하게 막던 장애물을 치우겠습니다.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더는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잡기 위해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고 내용은 토론하지 못하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국회법에 회의 일정을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여되는 국회의장 직속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정쟁에 밀려 때를 놓치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상임위에는 불이익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제21대국회는 과거 일하지 않던 국회와 결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야당도 국회 운영의 새로운 기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하는 국회와 검찰·사법 개혁 완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는 지난 4·15 총선에서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과 16년 만에 60%를 넘긴 총선투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법사위 개혁이 곧 일하는 국회의 시작

‘잡질’ 말고 ‘일’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만들겠습니다. 제21대국회 법사위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낡은 관습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하며 정부·여당의 주요 국정과제와 법안을 ‘발목잡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지난 제20대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건수만 91건에 달합니다. 꼭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개혁을 가로막는 등 각



윤호중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중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사위의 ‘갑질’을 방지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첫 시작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법사위의 월권적 행태 등 낡은 관습과 작별해나가겠습니다.

###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제도와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21대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린 말씀입니다. 미완의 과제로 남은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지난 제20대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비롯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등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한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강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해나감과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적인 절차 보장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법부 역시 법조인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 양쪽에 조직 개혁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나가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사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임차인들의 권리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재난 발생 시 피해업종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국민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대비함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에 국회도 함께 협력하며, 경제민주화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필수 과제입니다. 법사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포함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까지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모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성장에서 행복으로 국정운영 목표 전환해야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당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속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지 염려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총선이 감염병 위기 속에 무사히 진행될지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제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는 전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우리의 저력에 박수와 감탄을 보냈습니다.

국민께서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좀 더 잘하라는 격려를 압도적인 지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국난극복에 매진할 것입니다.

### 국난극복과 산적한 민생 현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인류가 맞닥뜨린 각종 질병, 2002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당시의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숫자와도 비교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장  
정무위원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억제·예방하는 방역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했습니다. 기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 그야말로 국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에 산적한 다른 현안들을 잠재운 것은 아닙니다. 비록 회복세를 보이나 ‘비대면 품목’을 제외한 전반의 수출이 둔화했고, 국가 기반 산업인 ‘항공산업’은 현재 주요 회사들이 매각 절차에 들어서는 등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위기는 중소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각종 일용직 노동 일자리가 소실되는 것은 거시적 지표의 하락 위기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제21대국회는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할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 정무위원장으로 의정활동 각오

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정무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국회 구성원이면 알다시피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공공기관 등 총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입니다.

소관기관 면면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초기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감염병 대응의 중앙재난대책을 마련 중이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산업의 금융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혁신,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혁신, 민생 현안과 관련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경제의 토대 강화,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반 마련, 적절한 국가유공자 예우, 가습기·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사회 실현 등 정무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산적한 현안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무위원장으로 놓치지 않고 챙겨나갈 것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만날 때의 간절한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최장의 장마와 역대급 폭우로 인해 고통받은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위원장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한 재정정책 및 합리적 세제개편 추진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와 고용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봉쇄조치로 인해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상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인 경제정책과 대응방안이 조기에 입안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한 재정·경제정책 추진

코로나19 위기는 그야말로 예측도, 대책도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입니다. 위기의 실상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뜻으로 ‘unknown unknown crisi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9%, 선진국은 -8% 역성장한다고 하니 근래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말 그대로 초유의 세계적 위기입니다. 일각에선 기업도산 숫자나 경제지표만 보고 1998년 IMF외환위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를 1930년대 전 세계 대공황과 비견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위



윤후덕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협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과 대응이 어렵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 국면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1% 성장하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보는데, 그해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인력의 일자리가 30만 개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마이너스 1% 성장은 신규로 직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의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대규모로 줄어드는 유례없는 국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기업 도산과 실업 확대를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여야 간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개편 추진

확대재정 기초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되는 정부지출 수요와 세수 변동 등을 감안해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에서 용인 가능한 국가채무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논의

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령화 등을 감안한 재정여력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단기적인 명목 채무비율에 연연해 재정을 운용하는 근시안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조치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해야 하지만 각 부서에서는 각 예산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현실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특위 체제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법안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 불안이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제 개편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일관된 교육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교육혁신 이룰 것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업 및 진로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이를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공교육을 혁신해 재산, 소득,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유기홍** 위원장  
교육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단순히 입시 제도 개편을 넘어 더 다양한 교육 목적과 방법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 혁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도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회변화, 혁신, 발전, 성숙을 부정하는 짧은 견해입니다.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여야 합니까? 오히려 군 전력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는 교육의 질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의 시기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도 중요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3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채용을 1천300명 줄이겠다는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학교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학습 부진 학생, 장애 학생, 이주 배경 학생을 포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는 1교실 2교사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시스템 갖춰야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대학사회가 위기인데,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국립대이든, 사립대이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혁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적 과제로 여겨졌으며, 코로나19로 그 시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1학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원격 교육을 시행해 ‘K-에듀’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관된 교육정책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도 교육위원장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할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학기술·ICT와 방송·통신의 융합과 진흥, 원자력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며,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사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원회입니다.

제21대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체계 정비와 예산 집행을 위해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디지털 대전환 기반 마련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4대 분야(△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58조 2천억 원(국비 4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90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 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박광운**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뉴딜’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법·제도적 미비사항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고자 합니다.

### 국가 연구개발(R&D) 환경 제도 혁신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나 연구원들이 장기간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국가 연구개발(R&D)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관리, 통제 중심의 R&D 프로세스와 낡고 복잡한 부처별 R&D 규정들이 국가 연구개발 부문에서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혁신을 향한 첫걸음을 뗐지만 국가 연구개발 환경 제도 혁신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못지않게 체계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도 전에 연구기관의 이해당사자 업무 단위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점검을 통해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자유로운 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과 예산 지원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사회의 건강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으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허위조작정보 근절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국민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레거시미디어(전통미디어)가 독자·광고 수익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팩트 체크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팩트 체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팩트 체크 시스템과 기술개발에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치를 통한 상임위 운영

지난 국회에서 과방위는 쟁점과 현안으로 여야가 대립하며, 대표적인 식물 상임위이자 기피 상임위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적 열망을 알고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와 대화, 타협을 통해 위원회 안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 외교 안보엔 여야 없어 국익 지키기에 앞장서겠다

제21대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난 6·15 정상회담 20주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가 팍 막혀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 및 인천광역시장 시절 쌓아온 외교력을 발휘해 남북, 북미관계를 헤쳐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제21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은 9일 남북간 핫라인 단절,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햇볕정책을 튼튼한 국가안보를 기초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재산입니다. 북한이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내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한 파괴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6월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으로 인해 지금은 잠시 ‘소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6월이었습니다.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로 남북 간 신뢰 회복 나설 것

제1호 법안으로 소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6월 초순 시작된 북한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큼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토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간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튼튼한 국가안보와 함께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총으로 하는 외교이며,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따르고,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딸이자 가족의 일원인 장병들과 장교·부사관들의 안위가 외교의 실패로 인해 위협해지지 않도록 외통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외교의 실패는 전쟁! 외교통일역량 확보 위해 노력할 것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외교의 중요성이 큼니다. 하지만 외교부 예산은 전체 512조 예산 중 0.5%(2조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교부 인력 역시 2천500여 명 수준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외교부가 자주적 외교역량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외교역

량의 대폭 확충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6월 초순부터 진행된 경색국면이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박히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다른 상임위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9월 초순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상품 전시회’는 미래통합당의 박진 위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 등과 공동주최하는 등 협치의 공간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년간 쌓아온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대사들과 만나 양국간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G20 국가 외교위원장과 의 회상 회이나 전화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중 등 관련국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는 제가 요즘 만나는 각국 외교사절마다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일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UN사무총장을 배출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외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 최고참 상임위원장입니다. 외통위를 최고의 모범 상임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무릎을 맞대고 국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

최근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흘렀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K-방역으로 모범을 보여온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등 비군사적 측면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천명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완전한 평화의 길에 진입하기까지에는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들 간 갈등의 고조와 첨단 군사력의 지속적인 강화 또한 안보상 예의주시해야 할 주요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장  
국방위원회



## 안보위협 대응 최우선 점검

국방위원회(국방위)는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병무행정, 방위력 개선 업무,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군이 전통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예기치 못한 유·무형, 다수의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은 힘으로 뒷받침돼야 함을 확인하고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확고하게 대응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안보 불안심리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다소 축소됐지만 한미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보여준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월 말(18~28일)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IOC)검증을 완료하고 올해 연합훈련을 통해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 완료하려 했으나, 축소된 훈련으로 인해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미 간 내실 있는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확실히 확보해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국방개혁, 방위력 개선 등 심도 있게 논의

아울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 합리적으로 타결되도록 지원하고, 여군 인력 확충과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등 ‘국방개혁 2.0’의 주요한 개혁방안이 포함돼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021년 예산으로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비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 운영 보장을 위해 2020년보다 6.0% 증액된 53조 2천억 원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방위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강한 국방의 초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가기에 앞서 승리를 위한 모든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승의 요체는 강한 힘이고 강한 힘이야말로 전쟁 없는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군이 아나시스 2호(ANASIS-II)를 쏘아 올려 독자적인 군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됐고, 우리 방산업체가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레이더를 개발했으며, 탄두중량 2톤 이상을 가진 탄도미사일 개발의 개가를 올린 것은 강한 힘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위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선승구전’의 중요성과 ‘국가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들 간에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강한 안보와 국방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국민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 닦아드리는 위원회로 거듭날 것

저는 지난 제19대·20대국회에서 법사위·국회운영위·교육위·국방위·각종 특별위원회 등을 두루 거치면서, 진정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최고의 입법상에 빛나는 ‘태완이법’을 비롯해 ‘피에타3법’,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고교무상교육법’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언론으로부터 ‘입법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그 풍부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제21대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관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확산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기후재난으로까지 불리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까지 더해져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코로나19로 눈물을 흘린 국민을 위한 민생형 추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많은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안위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12조 1



천893억 원을 편성해 국민이 낸 세금을 잘 돌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3차 추경에서는 약 1조 9천억 원을 통해 약 30만 개의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공공데이터 일자리,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국가적 기후재난에도 안전한 대한민국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던 8월 초, 행안위원장으로서 피해현장 점검, 여·야·정 회의 주재, 당·정·청 회의 등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씩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적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연일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때, 경기 안성지역을 찾아 복구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원과 군부대 복구지원을 요청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행안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여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현황상황을 화상으로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수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여야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재난대책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지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되었고, 피해가 막중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현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소방대원이거나 경찰관 등 재난관련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신 장비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제에 대해 여야간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 △풍수해 피해 원상회복을 넘어 대안적 예방체계, 개선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 △풍수해 피해에 대한 현실적 이재민 지원 방안 △소방·경찰 등 일선 현장 공무원 지원 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둘째, △경·검수사권 후속 작업을 통한 권력분배 완성 △자치경찰제 확립을 통한 공릉경찰화 방지 △정보경찰의 업무범위 확립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시대와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개혁 완성을 통한 권력 구조 재편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셋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방자치를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행안위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행안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문화로 아름다운 삶, 체육으로 건강한 삶, 관광으로 심포 있는 삶 드릴 것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오랫동안 깊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에는 문화 예술인들, 문화 산업·관광업 종사자 등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기고,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던 평범한 문화적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언제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화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도종환**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 입은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사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는 대부분 대면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방한 관광객은 21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4% 감소했고, 국내 관광산업 피해액은 5조 9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영화 관람객도 전년 대비 20~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영화인 3만 명 중 2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이렇다 영화 산업도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 행사 취소로 문화 예술인과 업계 종사자들도 존재의 위기를 느낄 만큼 상



황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패턴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연, 축제, 전시도 온라인으로 보는 등 ‘랜선 문화’가 등장했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포함, 제21대국회 전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계와 문화산업계의 피해를 점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단기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문화정책을 면밀히 준비하는 일,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계, 체육계의 권익 증진 대책 보완

또한 문화예술계, 체육계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일도 문체위의 주요 입법 과제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계를 휩쓸고 간 이후 ‘예술인 권리 및 지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대표발의되었지만, 제20대국회 마지막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21대국회 문체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키려 합니다.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법’의 안착 등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얼마 전 고(故)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많은 국민께서 슬퍼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체육계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수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난 8월 5일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성적지상주의, 엘리트 육성 위주인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향점을 바꾸는 일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려 합니다.

이 밖에 문화 분야에서도 지방분권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주요 정책 현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창작과 향유의 중간 지대에 있는 ‘지역 문화’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이 각 지역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상임위 차원에서 챙겨가겠습니다.

저것은 /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 줄시 ‘담쟁이’ 중 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문화예술인, 문화산업계, 체육계, 광계 종사자분들이 담쟁이처럼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회에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된 정책이 국민께 문화로 아름다운 삶, 체육으로 건강한 삶, 관광으로 침표가 있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대한민국 농어민의 꿈 실현하는 희망 사다리 될 것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경기침체, 아시아 일대의 폭우, 시베리아의 고온현상과 유럽의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지 금껏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국민과 농어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민생현장을 다녀보면 그 어려움과 고통은 단순히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과 책임감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21대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농어민·농어업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이 300만 농어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농어민의 정직함과 송고함에 대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해수위가 여야 구분 없이 합심하여 우리나라의 농



**이개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 발전과 농어민을 위한 법안 심사와 정책 입안,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기초연금 등 논의

제21대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와 제21대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법안 및 정책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 분야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부분을 다룰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반복적인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및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러 의원들께서 농산물 가격 폭락 시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법안과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부분도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도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층

적인 소득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해 농어업계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등도 다룰 전망입니다.

###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

다음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입법 및 스마트 어촌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다룰 전망입니다.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금어기·금지채장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통한 해양환경 복원, 친환경 선박 보급, 해운산업 재건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1대국회 농해수위는 농어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농어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우리 산업이 위기를 넘어 기회로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공공기관을 아우르며 국내외 실물경제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촉발된 국제적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내수를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소상공인과 대·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협치로 국내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학영**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중기위의 최근 주요 현안으로는 언택트 시대 맞춤형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의 이행,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등이 있습니다.

### 언택트 시대 맞춤형 산업 육성 등 논의

코로나 피해의 여파로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계는 스마트공장을 조성하고, 기업은 온라인 마켓과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에서 우리



나라는 이미 성공적인 방역체계와 생활 방역환경 조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언택트 시대로 한 걸음 앞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엔터테인먼트, 요식업과 운송 사업 등 관련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비대면 환경 조성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조세 부담을 경감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언택트 산업 기반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탈취 행위는 엄벌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룬 결과를 골고루 공유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일방적 거래 거절, 서면 미발급,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로 거래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어려워지고, 원청인 대기업만 성장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직권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내 산업이 위기를 넘어 기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대정부 업무를 간소화하며 직간접적 지원 방안을 모

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나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의 이행 역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치명적인 전염병,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재난적 기후 변화를 겪으며 더는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미루어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지만 화석연료 의존성은 여전히 세계 3~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규모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를 통해 완전한 전환으로 글로벌 인프라 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한 걸음씩, 그리고 안전하게 그린 에너지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화두는 ‘더불어, 다함께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묵묵히 협조한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분들 모두가 이번 국난 극복의 주인공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생기가 돌던 골목시장, 동네 상권의 모습에서 국민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한경쟁에 낙수효과를 외치며 대기업 성장 위주로 굴러가던 시장 질서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골목상권의 상인들이 근심 없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감염병 일상화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

어느덧 제21대국회 첫 정기국회가 다가왔습니다. 정기국회는 내년 도 예산심사와 법안처리, 그리고 국정감사 등이 실시되어 연간 국회 운영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지만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19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다면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만큼 중요함과 시급성을 요하는 상임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잠잠했던 코로나19가 교회발 감염자 확산 등 제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의료계 간 공동대응 체계 작동 및 방역·의료물자의 충분한 구축 여부 등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응해 우리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정애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의 희생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일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강력한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 8월 4



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고 9월 중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구성과 인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확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도 시급히 다뤄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되는 광역단체가 무려 11곳에 달합니다. 대구가 2.4명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많은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있지만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선 대면진료가 쉽지 않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사 판단에 따라 제한적, 국한적으로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원격진료로 오해돼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원격진료와는 다른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신속허가 및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 종결을 위해서는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는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개발지원 및 신속허가 등에 대한 법적 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일부 절차만 행정규칙에 단편적으로 규정·운영). 국민건강 보호와 포스트 코

로나 대비를 위해 신속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집단감염 발생 이면에는 생계를 위해 아파도 일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병수당을 도입해 쉬는 동안 고용 보장과 일정 부분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장애인권리 확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아동학대 방지, 어린이집 식중독 문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복지위, 일하는 국회 표본 되어야

여야는 공히 제21대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유는 명약관화합니다. 민주주의가 확대될수록 국회의 역할 또한 확대됩니다. 국회가 잘 운영되어야만 우리 사회 또한 선순환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철저한 방역만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담보할 것입니다. 복지위가 일하는 국회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복지위는 제21대국회 구성 이후 여야 간 합의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법안을 처리해 모범 위원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위원회 국민 행복 우선시 할 것



송옥주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먼저 환경노동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미세먼지, 환경오염, 일자리, 근로환경개선 등 우리 생활에 가까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생활밀착형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위원회인 만큼 주변을 잘 살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어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환노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노위는 여야 대립이 가장 두드러지는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두 부처가 집행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 삶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20대국회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 방식,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먼저 위원회의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해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들부터 서둘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나 법률이 적시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환노위를 운영하겠습니다.

### 고용안전망 확충과 ILO 노동관계법 개정 등 현안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주요현안으로는 고용보험의 가입범위 확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통한 고용안정망 확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97.2%에 달해 거의 모든 국민이 의료 안전망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51.3%에 불과해 많은 국민들이 고용으로부터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적인 ILO 비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노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노사 토양에 맞게 관련법을 정비해 노동법 개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린뉴딜 사업과 자원순환 전환 대정책 등 논의

환경부와 관련된 주요현안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과 자원순환 전환 대정책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조기 전환과, 국격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산사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스쿨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그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면서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재정사업부터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비닐 등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거·재활용 업체의 어려움이 커져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폐기물 문제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력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작은 국토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이용이 관건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토위는 주택, 토지, 건설, 수자원 등 국토 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각 개원한 제21대국회 국토위는 7월에서야 상임위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비롯, 주택 관련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2년마다 보증금 인상과 이사 걱정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750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기본권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진선미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주거기본권 강화의 계기 마련

기본적으로 국토는 누구의 것일 수도 없고, 누구의 것이어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제21대국회 국토위에서는 주택이 부의 상징 혹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일과 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론을 만들고 제도를 손질하고자 합니다.

국토라는 자원은 지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반면, 인구의 절반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넓지 않은 국토를 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개발로 고속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덕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집중을 넘어 과열 양상으로 몸살을 앓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밤길 가로등 부족을 토로하는 양극화 시대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룰 것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국회와 행정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이 넓지 않은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토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은 수도, 전기, 통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망산업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물자가 우리 국토의 어디로든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탄탄한 그물망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

적인 목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또한 교통 분야입니다.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늘면서 물류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위는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류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란 무엇인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의 답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개발의 대상이었던 ‘국토’를 보존의 대상으로 바꾸고, 건설의 대상이었던 ‘교통’을 이동권 보장의 관점으로 돌아보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인류가 처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도래한 대전환의 시기, 제21대 국토위가 준비하고 대비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일정을 앞둔 시점입니다. 1년 나라 살림 예산 약 400조 원. 그 중 8분의 1인 약 50조 원이 국토교통부의 살림 규모입니다. 큰 살림만큼 꼼꼼한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큰 살림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이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감사(監査)하겠습니다. 🍷

## 여성·가족·청소년 의제를 대전환기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대전환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술기반 사회가 코로나19로 우리 삶 속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도적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소위 ‘87년 체제’는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전환기는 사람들의 생각, 삶의 방식, 인간관계, 노동 등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 속에서 수반되는 각종 사회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회는 국민의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결정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여성과 가족 그리고 청소년의 삶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1대국회 첫 정기국회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가위에서는 지난 제20대국회에서 못다 한 현안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입법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여성인권과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 단계 마련해야

다양한 여성폭력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n번방 후속 입법과 성범죄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정춘숙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주목해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을 각종 성범죄로 유인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법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기술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 일자리의 변화가 커짐에 따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51%에 불과해 남녀 간 고용격차가 20%포인트나 되며, 성별임금격차는 34.6%나 됩니다. 노동시장에서 낮은 여성의 지위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폭력의 지속이라는 오랜 문제와 함께,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 즉 경제성장, 적정 인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녀 간 고용격차와 성별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대책이 강화돼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난 제20대국회 말에 여가위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의 피해의 경험이 세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운동과 평화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청소년 인권보호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고,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진입한 수준이 된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모든 국민, 특히 우리

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21대국회에서는 아르바이트 등 일터의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의 양육 지원과 취업,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깊은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가위와 여성가족부 모두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은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강화돼야 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인력·예산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이 그 중요성에 비해 평가절하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지와 관심 그리고 응원이 2천500만 명의 여성과 1천만 명의 아동청소년의 삶을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폭력에서 안전으로, 소외와 배제에서 존엄을 보장받는 삶의 주체가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스웨덴의 엘란데르 전 총리는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스웨덴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제21대국회 여가위의 입법정책이 전환기에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일하는 국회 제도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Q. 우선 제21대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각오와 포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제21대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여당에게 180석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과 예산의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입니다. 상시 국회 시스템을 제도화해 일하는 제21대국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벗어나기 위해 제2차,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35조 규모의 예산으로 사회안전망을 긴급히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 첫 정기회가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가동됩니다.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A. 코로나19로부터 파생된 위기의 시대이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 국회는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 시기에 제21대 첫 정기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의 자세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첫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코로나19로부터 파생되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발생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위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 법안과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청의 승격

등이 실제적으로 K-방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휴먼뉴딜의 3대 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의 삶도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의 3대 원칙 하에 세계 각국이 방역의 모범으로 인정한 K-방역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Q. 파트너이신 상대 원내수석부대표께도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모두 제20대국회에서 처음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각 당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보좌관으로서 국회를 경험했다는 공통점도 비록 각자가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국회를 이해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여야가 원만히 협상하여 국민 앞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책과 정치, 정당 모두 바꾸는 삼정(三政) 혁신 이룰 것”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Q. 우선 제21대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각오와 포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국민께서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을 돌아봐주실 수 있도록 반성과 성찰, 혁신과 쇄신을 위해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해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가능한 ‘정치’를 펼치고, 국민의 희로애락을 공감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삼정(三政)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부터 혁신하고 쇄신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 첫 정기회가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가동됩니다.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A.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 국회’입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책임 떠넘기기, 편가르기 정치는 그만하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방역에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기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 방역 성공과 4차 추경편성을 통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 추진에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며 일하겠습니다.

**Q. 첫 정기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미래통합당의 정기국회 키워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제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에게 조속한 법안통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코로나 4차 추경안 편성 △치료제 확보 △백신 개발 △KF94 마스크 수급 안정 △전국 의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지원 △현장실태 파악 등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에 톡큰 협력은 물론 국민 입장에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의 삶도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장기화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그동안 많이 지치셨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잠 한숨 제대로 못자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고 계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공무원 등 방역 관계자분들 또한 너무나 고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국난도 훌륭히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들이 계시기에 이번 코로나19 국난도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내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Q. 파트너이신 상대 원내수석부대표께도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경기도 지역구이면서 국회 보좌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지난 제20대국회부터 경기도권 선·후배로 여야를 넘어선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평소 힘이 아닌 논리와 설득으로 야당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원내협상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판하는 등 진영 논리를 떠나 평소 소신과 강단있는 언행에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귀 기울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 울산 동구 조선과 관광, 두 날개로 비상 꿈꾸다

권명호 의원

미래통합당,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 동구는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장 낭만적인 곳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이자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 주전몽돌해변 등 기억에 남을 빼어난 명소들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동구 구의원을 시작으로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울산 동구 토박이’ 권명호 의원을 만나 그의 지역사랑과 의정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왕암공원과 울산대교 전망대

권명호 의원과 함께 울산 동구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왕암공원이었다.

“대왕암공원은 대왕암 가까이 자리한 울기등대의 이름을 따 ‘울기등대공원’이라 부르다 2004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령 100년이 넘는 1만 5천 그루의 해송(海松)이 우거진 산책로를 지나면 울기등대를 만날 수 있고 조금 더 가면 대왕암, 용굴, 탕건암 등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대왕암 산책로에 이릅니다. 울산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이자 관광명소로 이름이 높은 곳입니다.”

대왕암공원 안에는 숲속과 해안을 따라 다양한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고 캠핑장과 어린이 테마파크, 소리체험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12월 문을 연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 36면, 캐러반 17면 등 총 53면의 캠핑 공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대왕암공원 산책로



14:30

간을 갖추고 있으며 샤워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가시즌에는 예약 경쟁률이 15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대왕별 아이누리’는 어린이들이 모래와 흙, 나무 등 주변 지형과 자연물을 이용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놀이시설도 즐길 수 있다.

울산대교는 울산의 남구와 동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민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다리다. 해발 203m 화정산 정상에 자리한 울산대교 전망대에서는 울산대교의 전경과 선박을 건조 중인 현대미포조선, 수출용 자동차가 뺨뺨하게 자리 잡은 현대자동차 야적장, 울산항 부두, 대왕암공원 등을 내려다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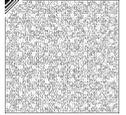
### 조선업 위기와 관광도시 동구의 꿈

요즘 울산 동구는 조선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조선업은 동구 경제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분사와 구조조정,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구조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동구 인구가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이 동구의 대표 먹거리 산업인 것이 사실이지만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구청장 시절부터 동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저는 조선과 관광이라는 두 날개로 동구가 미래로 부



상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관광과를 신설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쏟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구청장 시절 대왕암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바다산책길의 다리를 정비했다. 또 어린이 테마파크와 소리체험관,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건립 등 동구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주전 어촌체험준비동 신축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동구는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라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동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동구 영업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청장 4년 동안 제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잠이었습니다. 늘 수면부족에 시달렸으니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권명호 의원은 2년 후인 올해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때 정치가 내게 운명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냉정하게 고민했습니다. 최근 30년간 울산 동구는 유독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구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하는 것도 책임 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동구의 영업맨이라고 생각하며 뛰어왔는데 이제 동구를 전국에 내놓고 팔아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동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가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대형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을 설득해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울산 동구가 조선과 관광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울산 동구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15:30



동울산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16:00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이헌승 의원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하여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달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전해철 정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다. 지난달 이헌승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을)은 다음 칭찬 주자로 전해철 위원장을 소개하며 “따뜻한 인품과 더불어 유머와 위트, 균형 감각까지 갖추신 분이고, 여야를 떠나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전해철 위원장은 “평소 좋아하는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니 진심과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 민주주의의 실현은 대화와 타협에서 나온다

전해철 위원장의 정치입문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던 전해철 위원장은 1993년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 뛰어들자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도왔고 최연소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했다.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정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정치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치가 촛불혁명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보람을 느꼈죠.”

전 위원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권



력기관 개혁 등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는 “최근 공수처법 통과 등 필요한 개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정치개혁의 성과는 크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국정원 개혁 완수’가 목표

정보위원회를 이끌게 된 전해철 위원장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꼽았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고 국내 파트의 정보수집관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바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회귀했고, 불법적인 정치 관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자체 개혁을 추진해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절연과 조직혁신에 주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성과가 후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해철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를 3선 의원으로 키워주신 안산 지역구민들을 위한 현안들도 빠짐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국내 최초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됐고, 6월에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가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또 수인선이 올해 9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신안산선의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안산 유치 등 다양한 교통현안이 있는데, 안산이 확실한 수도권 최고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이종배 의원을 추천합니다

전해철 위원장은 다음 칭찬 주자로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을 추천했다. 전 위원장은 “온건하시면서도 정책적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했다. “제20대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를 했는데, 당시 이종배 의원께서 야당 간사를 맡아 함께 일했습니다. 또 대학 선배시기도 하고요. 이 의원의 제안으로 함께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소신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리하게 의견을 표명하신다”고 설명했다.

“여야를 떠나 현재의 어려운 현안과 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낭	중	지	추
囊	中	之	錐



홍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달서구갑

## “공직경험과 노하우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일조하고자”

20년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제21대국회에 입성한 홍석준 의원의 좌우명은 ‘낭중지추(囊中之錐)’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좌우명을 늘 가슴에 새기며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꾸준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평가해준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계명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홍석준 의원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다.

“시험을 준비할 당시 저 역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 낭중지추라는 좌우명을 떠올리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



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거둔 열매를 보며 평가하고 부러워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들인 노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며 부러워하는 대신 거기에 쏟아부었을 노력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실력을 기르는 것이 낭중지추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동차주행시험장, 로봇산업진흥원 등 유치

홍석준 의원은 대구광역시청에서 산업지원기계금융과장, 창조과학산업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챙기는 일을 도맡았다. 특히 자동차주행시험장, 로봇산업진흥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그의 손을 거친 굵직한 사업들은 섬유산업 외에 주력산업이 없었던 대구에 새로운 미래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처음 대구에 자동차주행시험장을 유치하려고 했더니 관계부처에서 ‘자동차회사도 없는 곳에 무슨 주행시험장이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저는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자동차에 탑재된 부품을 테스트하는 곳이고, 대구가 부품회사 기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했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계의 시스템이고 대구에 기계·금속부품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설득해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원 없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도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수록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 변화 없이는 지역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입문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공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뛰어난 그는 두 달여 만에 경선을 치렀다. 당시 달서구 갑 지역은 현역 의원이 컷 오프 되면서 다른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홍석준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경선에서 그는 단수 공천을 받았던 전 의원을 2배 가까운 차이로 이기면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누가 시켜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구경제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진심을 알고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짧은 선거 준비기간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던 것은 그동안 일로 맺어온 사람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당장 눈에 띄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이 두 가지를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은 날로 팽창하고 있지만 지방은 급속도로 황폐해지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살길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성서산업단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과 지역의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그간 대구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간호사 출신의 노동운동가인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을 지내다 정치에 입문, 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난 제21대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는 이수진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와 억척 살림꾼인 엄마 밑에서 사남매중 맏딸로 자란 이수진 의원은 유년시절 남자형제들만 예뻐한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 위로 오빠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사과를 깎으시면 맨 먼저 오빠를 주고 그 다음 남동생을 주고 다음에 저를 주셨어요. 한꺼번에 깎아서 다



같이 나눠 먹으라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못참는 성격이 생긴 것 같아요.”

학창시절 지리교사를 꿈꿨던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명예퇴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가족의 권유로 간호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취직한 그는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일할 때 계속되는 야근에 몸이 지쳐 있었는데 한 아기의 사망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퇴근길 버스 안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 아직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부당한 인사처우를 받게 됐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노조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제 노동운동의 시작이었습시다.”

이후 그는 노조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병원 안에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펼쳤다.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용어)은 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떠맡게 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그동안 모두 이렇게 일해왔다고 참으라고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맞서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힘들지만 나뿐만 아니라 동료, 앞으로 후배들까지 위한 것이

라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보람과 희열을 느꼈어요. 타인을 위한 삶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2012년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통합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최고위원을 지냈다. 지난 제20대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후순위로 고배를 들었지만 이번 제21대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 더 나은 노동환경 만들기 위해 일할 것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사회안전망과 여성임금 차별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수진 의원은 “비정규직 등 노동 관련 현안이 많다. 현 정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임금 차별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미진하다. 정부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중이 어려워할 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뛰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 농작물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날짜	주최자	제목
8.5	서삼석·소병철·신정훈 의원·임이자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8.5	조승래·조명희 의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
8.6	전재수 의원, 뉴스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8.11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8.18	김철민 의원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
8.21	고영인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서삼석·소병철·신정훈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8월 5일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기온, 자연 재해 등으로 누적되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극복하고,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남 영암 대붕감과 경북 청송 사과 피해 사례 발표로 시작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과수 4종의 재해보험 보상이 올해 갑자기 하락한 것과 일괄적인 지역 할증률 적용에 따라 재해 발생이력이 없는 농가들까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

농업농민정책 연구소 ‘너름’ 이수미 정책기획팀장은 “농업재해 손실을 보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해보험이 시장 기능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농업보험 기반을 구축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고도화 및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농가 수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명희 의원(미래통합당)은 8월 5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이 해제되는 등 우주산업 연구개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발사체비행성능팀장은 “정부가 최근 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면서 “고체연료 로켓으로 소형발사체 시장에 진출해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주발사체 연료를 액체만 사용했다. 액체연료 로켓은 발사 전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등 작업이 필요하지만, 고체연료 로켓은 즉시 발사가 가능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김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장은 “고체연료 발사체는 산업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적으로 매력이 큰 분야다. 국가 차원에서 국내 발사체 기술을 종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업체, 한 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상의해 민간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에서 우주 개발 전문가로 활동해 온 조명희 의원은 “이번 지침개정은 우주선진국처럼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발돋움할 기회”라며 “항우연이 기술연구를 주도하 고, 우주 산업에 민간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려웠던 연구 및 정책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벤처 스타트업 등을 포함해 논의자 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6일 ‘뉴스핌’과 공동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7월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천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지 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는 “전산시스템화가 되면 증명서 발급과 보험금 산 정 및 지급이 빨라져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 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용도로만 이용하 도록 입법 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문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사가 연합해 민간심사평가원을



##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만들 수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 더 효과적인 것”이라며 “전송비용 문제는 실손보험사업비를 일부 전용해 지급하면 된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민간보험의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건 행정인력이 별도로 없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8월 11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은 지난 제20대국회에서 도서 위원장 대표 발의로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제20대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서 위원장이 제21대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0대국회에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와 소방관이었던 동생이 사망하자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간 친모를 둔 고(故) 강연희 전북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현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제21대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구하라법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올바른 개정방

## ●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

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 씨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민법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천안함, 세월호 사건,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보험금 또는 유산금을 노리고 등장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상속권 박탈 관련 입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의 발의안은 민법 제1004 조상의 상속결격사유에 제6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모두 초등학생이 맡았고, 토론은 유서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 이현석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조자영 굿네이버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이 맡았다.

발제자들은 각각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하게 놀 권리, 감염병 상황과 예방에 대한 아동 눈높이의 정보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후퇴된 아동 참여권, 과도한 학습 부담 속에 소홀해지는 아동 생존권, 원격수업 환경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자영 굿네이버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아이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어른들만 모여 논의하기 보다는 어른과 함께 이 사태를 처음 직면한 아이들과 머리 모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은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어린이들의 질문을 받아 특집 정례브리핑을 실시한 것에 대



##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해 “매우 중요한 시도였고, 아동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아동들의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이야말로 우리 교육 현장의 중심”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오영훈 의원)는 8월 21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국회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위험이 커질수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는 지속해야 한다”며 비대면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은 영아 학대가 증가하는 것에도 주시해야 하며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피해 아동의 장기간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보호서비스 마련과 학대로 인한 분리, 보호체계 진입, 원가정 복귀의 과정을 데이터화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준비 중인 아동보호 관련 법안 개정과 더불어 개정된 법안이 사회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리. 윤성혜

# 국회,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의결

국회는 7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이어 국회는 8월 4일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과 ‘부동산 4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국민적 관심을 받은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소관)

지난 7월 15일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으나,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함으로써,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임



차기간을 4년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또 차임 등의 증액 상한 비율을 5%로 하되 시·도는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 또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안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한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

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특례 적용 요건으로 가격기준을 추가하고,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혜택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했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 제도를 도입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 위법·비리를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의심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감염위험 시설이나 운송수단의 이용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병상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원 시설 등을 동원, 환자를 이송·전원(轉院)해 치료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현재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검사비도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게 돼 국내 방역체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법률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입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폐지하고, 최근 부동산 과열 상황을 고려해 아파트 매입형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폐지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으며, 단기임대주택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차거래 할 때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대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과 같이 사업 진행의 각 절차에 조합 총회를 거치도록 하여 조합원의 비용이 증가하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 법률은 시장·군수 또는 토지구획공사 등 공공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등의 일부 절차를 총회 대신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서면 동의 포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현행법은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재건축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두 차례 유예를 거쳐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개정 법률은 제도 운영상 미비하다고 지적되어왔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확대(20→30%)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을 조정(30→20%)하며 부담금 예정액의 정확성 확대를 위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산정할 수 있도록

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그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과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확한 임대차 시세자료가 없었다. 이에 개정 법률은 계약당사자가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기존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만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청년 등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새 법률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뿐 아니라 노후된 오피스·숙박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하여 개량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의 매입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 등이 ‘주택법령’ 및 ‘주차장법령’에도 불구하고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8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장혜영 의원(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장 의원 옆에서 조성현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

## 눈과 귀를 여는 국회

### 제한국회 이래 72년만에 수어통역 지원

8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전과는 다른 장면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옆에서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용을 전하는 수어통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국회는 제한국회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장 의원은 첫 수어통역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의사중계의 수어통역과 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턱을 낮추고 눈과 귀를 열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

글: 윤성혜

##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 합의로 의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을 거쳐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대안의결의 배경에는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여야 위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12건의 법안들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는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우정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



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했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당연취소 사유 확대 및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스포츠비리 유형화, 임시보호시설 운영,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 독립적 시책장구 보장 등을 규정했다. 또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비리 등의 조사 방법, 협조 의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 제재 등을 규정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증언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의 징계요구시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선수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통합체육회 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퇴사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되어 관련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해 ‘체육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일상 속 드론시대’ 앞당긴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drone) 시장은 2026년 약 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은 드론택배, 드론택시 등 드론 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드론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항공안전 관련 규제,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지난 5월 1일 시행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인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상 속 드론 시대’를 앞당길 ‘드론법’에 대해 들어봤다.

드론법은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단기에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도록 했

다. 아울러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그동안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규제로 도심 내 활용이 어려웠다. 드론법 시행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등 비행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문석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법이 시행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역지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3건의 신



청이 접수됐다”며 “향후 현장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안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드론법은 드론시스템의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시범사업구역은 새롭게 개발된 드론기체 및 시스템의 완성도·안정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기체 추락이 발생할 경우 테스트를 진행하는 드론 사업자 및 개발자에게 보험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드론시범사업구역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달리, 공모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팀 이성일 차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정을 통해 그간 드론 제품개발과 관련된 시험비행 및 인증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드론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 드론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또, 드론법은 체계적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 종사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드론산업협의체는 향후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드론 관련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고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범부처 민·관 합동 정책심의회기구인 드론산업협의체는 국토부 장관(위원장), 7개 관계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9월 제1차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시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첨단항공과의 예산은 2017년 164억 원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57억 원과 528억 원, 올해에는 656억 원으로 늘어났다. 첨단항공과에 따르면, 드론 관련 예산은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271억 원)과 기술혁신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드론 활성화 사업(100억 원)에 집중돼 있다.

드론법 시행을 전후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가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다. 드론기체 및 시스템을 전시하고, 국내 드론기술 시연 등을 선보인 이 박람회에는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250여 개 이상의 전시·체험 부스를 마련했으며 3일간 관람객 2만여 명이 다녀갔다. 문석준 첨단항공과장은 “오는 11월 ‘2020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글: 박민선

#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 연방의회 운영현황 및 대응입법



주성훈 독일주재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국정운영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 40%대에 머물던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79%까지 상승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연방의회가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입법을 통해 뒷받침됐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연방의회 운영현황 및 연방의회의 코로나19 대응입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연방의회 의사규칙 개정해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먼저 연방의회는 3월 25일 연방의회 의사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에 대비해 연방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하면서 의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정했다.

둘째, 본회의는 기존 방식대로 대면회의 방식을 유지했으나 위원회의 경우 대면회의 외에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몇몇 위원회에서는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함께 실시했다.

셋째, 연방의회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기립이나 거수로 안건을 표결해 본회의는 기존 방식대로 표결했으나 위원회에서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안건을 투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했다.

넷째, 연방의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나 청문회 등 일반 국민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헌법 제46조제3항은 의원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



할 경우 연방의회는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감염보호법’에 따라 관할 당국이 의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명령을 내릴 경우 연방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의장 또는 선거조사·불체포특권과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는 실행된 조치가 연방의회 기능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승인절차를 마련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해 1·2차 추경

다음으로, 연방의회가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입법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의회는 경기부양 및 경제안정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한 경제안정화자금법, 부가가치세 세율인하에 관한 코로나 세금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특히 1·2차 추경예산안 의결로 정부 재정지출은 5천 85억 유로로 확대되고, 순 차입 규모가 2천 178억 유로로 결정되어 신규 차입을 위해 헌법상 재정준칙(신규차입 한도를 명목 GDP의 0.35%를 유지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둘째,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연방의회는 조업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을 월 총소득 상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업장 내 근로자 비율을 ‘1/3 이상’에서 ‘10%’로 완화했고, 임시직 및 계약직까지 조업단축 지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조업단축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셋째, 연방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차료 체납

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사회보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재산 실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기초 보장 혜택을 부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특정한 직업군(의사·간호사·경찰 등)에 대한 부모수당 등 특례 인정, 요양시설 직원에 대한 코로나 상여금 지급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용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병원재정을 지원하는 법률들을 의결했다.

끝으로, 연방의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확대, 요식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행사 주최자·여행사 바우처 발급권한 부여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공고절차 마련, 온라인 협의절차 도입 등 행정절차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방의회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입법은 헌법상 재정준칙의 예외를 설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경기부양, 경제안정화, 고용안정 및 사회적 안전망 설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과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체육계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0-07-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20-08-04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 국회, 집중호우 피해 점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열어



## 행정안전위, 집중호우 피해 현황 점검 및 대책마련 논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8월 10일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서영교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여야 합의로 진행된 현안보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소방청장 등의 현황보고는 모두 화상 시스템으로 진행됐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 예보관리시스템 보완, 물관리 소관 부처 일원화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전남·전북·경남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재난 지역선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민들이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위협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재민 시설의 철저한 방역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여야가 재해 극복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8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악의적 고액 채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불공정 탈세·채납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납세자에게 편한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 뒷받침,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 등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쟁점이 됐다. 유경준 위원(미래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정서법에서는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가족 5명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변했다.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우원식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목사는 과거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작년에 경찰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등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희숙 위원(미래통합당)이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짝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등 논의

8월 20일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고용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격으로 볼 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윤희숙 위원(미래통합당)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세액공제가 박탈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최대 5배로 징벌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하는 매우 이상한 세법 시행령”이라며 수정을 요구하자 “중부세법에 ‘1인 1주택’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질 경우 법상(9억 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현재 시행령상 부부가 공동소유할 경우 개인당 6억 원씩 공제해줘서 부부 합산 12억 원 공제가 되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해당이 안 된다”며 “공시가격 9억~12억 원 구간은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세 부담이 더 적고,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설치를 비판한 서병수 위원(미래통합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부처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부로서는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협의 초기 단계이고,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는 “거의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제기한 수준 정도”라고 밝혔다.



### 환경노동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전망 등 논의

8월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한다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고용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2차 대유행 시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나”라는 김성원 위원(미래통합당)의 질의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갑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도 대비해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일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업 급여를 통해 소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 기간도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 기간이 상한에 다가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180일에서 60일 연장된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다른 일반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최근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

글. 박민선

## NEWS

### 8/3 박병석 국회의장 “타협의 국회 만들자” 중진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월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토론과 타협의 국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동도 제안했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토론과 타협의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앞으로 제21대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여야 중진의원들에게 “정세균 총리에게는 세가지의 당부 말씀을 직접 드렸다”며 “중요한 법안·정책 등을 야당 등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고, 법안은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장관들이 국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변재일, 설훈, 조정식, 이낙연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 8/5 박병석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 위촉



박병석 국회의장은 8월 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병관 전 의원을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박병석 의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IT 전문지식과 경영 혁신역량을 갖추고 국회 의정활동 경험까지 보유한 김병관 전 의원이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적격자”라면서 “우리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이 세계의 모델이 된 것처럼 디지털혁신국회도 세계의 모델이 되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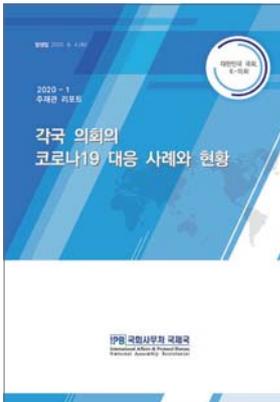
이에 김병관 디지털혁신자문관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회가 혁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관 디지털혁신자문관은 국회 벤처 조직 ‘디지털 국회 추진단’과 협업하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입법지원시스템 개발계획인 ‘디지털태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국회사무처, 주재관 리포트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 발간



국회사무처는 8월 4일 8개 국가 10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외 주재관들이 파악한 주요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새로운 회의 운영방식을 담은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

을 발간했다. 국외 주재관들이 주재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별도 보고서를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7월 29일 열린 국외 주재관 화상간담회에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보고서로 발간해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국회운영에 활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8개국이 코로나19가 장기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하고 있는 의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원격회의, 대리투표 등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의회 운영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은 온라인 원격회의를 포함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회의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미국 하원의회는 지난 5월 15일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 의원이 최대 10명의 의원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사규칙 변경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하원 의회는 3월 25일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14'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연방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각국 의회차원의 자체 방역매뉴얼 준비 상황, 코로나19 속 의회외교활동 상황,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통해 국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https://nas.na.go.kr>→정보마당→의회외교활동→의회외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국회 최초 벤처 조직 출범

국회는 8월 5일 국회 최초의 벤처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과 '세종지사당(국회분원) 건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벤처 조직'은 혁신적인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벗어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 조직이다.

참여 직원이 정해진 기간동안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제외돼 과제 수행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자(담당부서)와 수요자(국민) 간 유기적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 NEWS

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기관 벤처 조직은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중인 2018년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 부처에서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조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은 벤처 조직을 국회에 전격 도입해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제1호 벤처 조직으로 출범하는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국회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정보 생산 및 시스템 개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용자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향후 2개월 간 활동하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기술적 전문성을 보강할 예정이다.

제2호 벤처 조직인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은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전략 마련과 국회 내·외부 공감대 확산을 추진과제로 삼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번 벤처 조직의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3호 벤처 조직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향후 국회 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 방식을 제도화해 우수 인재 참여와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지속적으로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은 “벤처 조직 출범은 그동안 공

무원 조직 특유의 칸막이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의 해법을 찾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부여된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회에서 생산한 벌꿀, 공무원 근로자 900명에게 증정



8월 12일 국회 소통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사당 내에서 생산된 아카시아 벌꿀 600kg을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 900명에게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다.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추진했던 국회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회도서관 옥상에 100만 마리의 꿀벌을 입식시켜, 5월에 2차례에 걸쳐 아카시아벌꿀 약 600kg을 생산했다.

이번 국회 도시생태 복원사업에서 벌통 설치와 관리를 맡았던 ㈜안상규벌꿀 안상규 대표는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사당 내에 벌통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벌꿀을 국회의사당 각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



직 근로자분들과 나누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사당 내에서 생산된 뜻깊은 벌꿀인 만큼 국회 공무원직 근로자분들이 드시고, 코로나19도 이기고 더욱 힘 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을 비롯해 각 과의 과장들과 국회 내에서 근무 중인 청소, 승강기, 조경 등 현장 공무원직 근로자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 2020년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실시

국회사무처는 8월 22일 신서증, 목일증 등 총 5개 시험장에서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시행했다. 이번 국회 9급 공채는 총 44명을 채용하는 가운데 2천939명이 지원해 6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회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을 점검 후 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체온측정,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9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9월 24일 경위직 및 방호직 실기시험, 10월 6일 속기직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 까지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국회는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회도서관, 서울대·전자신문과 ‘AI와 국회 포럼’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대, 전자신문과 함께 ‘국회의원의 새로운 보좌진: AI 보좌관’을 주제로 ‘AI와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국회도서관, 서울대, 전자신문과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회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기술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패널로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회도서관 노우진 법률정보실장 등이 참석해 AI 보좌관 실현을 위한 전문가 논평을 했으며, 발표는 현은희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장의 ‘국회의원의 새로운 보좌진: AI 보좌관’,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AI, Media’, 강병준 전자신문 부국장의 ‘AI 시대, 다시 묻는 저널리즘의 본질’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서울대, 전자신문이 가진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4차 산업혁명

## NEWS

에 국회도서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정부가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8월 7일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조 1천억 원, 총지출은 485조 1천억 원으로 통합 재정수지 12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기준 국가 채무 잠정치는 72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번 결산분석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22권으로 구성돼 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총량,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해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 및 사업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했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및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과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월 19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이상민·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인재 육성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는 입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 뉴딜의 중심인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이윤근 ETRI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이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이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는 법제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위한 법제도 쟁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산업별·규모별 맞춤 정책, 민간 경쟁 토대 마련,

영상 가명화·저작물 공정이용 등 새로운 법적 쟁점, 설 명가능한 인공지능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삼박자, 기술 개발·인력 양성·법제도 마련에 대해 다각적이고 총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8월 20일 발간했다.

김유빈 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보고서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13대 분야로 구분한 뒤 전문가 150여 명이 미래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도출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143개 정책과제를 도출했고, 최종적으로 의원실 설문조사를 통해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선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래연구원이 곧 발간할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3종 중 첫선으로 내보이는 것이다. 보고서 3종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Futures Brief', '국제전략 Foresight'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현곤 원장은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래관련 이슈를 적시에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약사인 내가 국회에서 일하는 이유



은세현 서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나는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에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지만, 당시 국회공무원으로는 처음이라 이색 경력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 동안 약사가 왜 공무원이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께서는 농담처럼 진로 설정의 실패 사례라고만 대답했는데 이 기회에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제약회사 근무 후 공직 도전까지

2010년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 생활이 하고 싶어 외국계 제약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신규 출시된 소아백신의 판매를 맡게 되었는데, 해당 시장은 이미 다른 회사의 제품이 오랜 기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뚫기가 쉽지 않았다. 백신은 일반 약과 달리 병원에서 직



접 접종하기 때문에 종일 소아과를 방문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기존 제품이 익숙한 소비자들을 설득하느라 같은 곳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방문했고, 10개라도 써보겠다고 하면 뭘 듯이 기뻐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이하 NIP)이란, 국가가 예방접종을 권장해 지역사회의 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NIP 대상 백신에 대해서는 통상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된 백신은 접종률이 올라간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이 NIP에 도입되면 일차적으로 접종률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내가 다니던 회사도 호주 등 외국의 NIP에 자사 백신을 성공적으로 도입시킨 임원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등 NIP 확대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담당하는 백신이 NIP에 포함되는 경우 얼마나 판매량이 증가할지 예측한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몇 달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어 판매하는 개수와는 단위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국가 사업은 정말 큰 규모구나, 큰일을 한다는 것은 저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런 일에 관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할 때 그때의 생각이 났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고 싶었고, 그 결과 운 좋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국회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법안과 예·결산 검토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일부나마 지원할 수 있어 그때의 소망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다.

## 국가재정의 역할 중요한 시기… 보탬되도록 노력할 것

2017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결산심사, 국정감사 등 재정심사활동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결산 및 공공기관 분석, 사업평가 보고서 작성, 조사분석 및 법안 비용추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정책총괄담당관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직접 재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원활한 분석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부서로서 보고서 발간 총괄, 조사·분석과 연구용역 관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난 7월에는 개청 이래 최초로 한국경제학회 등 재정·경제 분야 5개 학회와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과에서 개최 준비와 진행을 담당해 무사히 끝마치기도 했다. 제21대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재정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학계와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처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한국경제가 충격에 빠진 지금, 국가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재정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나 역시 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 왜 불경기에 주가가 더 오를까



요즘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왜 경기가 나쁘는데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가’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나쁘지만 금값, 주가, 부동산 가격 등 자산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쁘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치명적인 결림돌이 한 가지 있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오르기 마련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10년쯤 후에는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한다면 10년씩 돈을 빌려주는 만기 10년짜리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은 더 떨어졌다. 미래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시장이 생각한다면 결코 나타나는 안되는 현상이다.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돈이 넘쳐흐르다 보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게 금값의 상승을 설명하는 시장의 논리다.

그런데 이 역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물가는 오를 것이고 그러면 금리도 올라갈 것인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왜 계속 내려가기만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자산 가격 올라

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이론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오피스텔의 가격은 얼마쯤인 게 적당할까.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수명은 무한대이며 앞으로도 계속 월세는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시중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가 10%라면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대략 6천만 원쯤 될 것이



다. 금리가 10%라면 6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로 600만 원이 나오는데 마침 그 오피스텔도 1년에 월세로 600만 원쯤 들어오기 때문이다(현실에서는 공실 가능성 등을 반영해서 가격은 6천만 원보다 낮게 거래되지만 그냥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시중금리가 1%로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6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6억 원을 은행에 넣어둬도 연간 이자가 600만 원에 불과하니 월세가 600만 원이 들어오는 오피스텔은 6억 원의 예금과 비슷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10%인 시기에는 10억 원의 이익을 매년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으로 계산하지만 시중금리가 1%로 내려가면 똑같은 10억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천억 원이 된다. 1천억 원을 예금해도 이자가 10억 원밖에 안 나오는 시절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가 나빠지면 10억 원의 이익을 내던 회사도 이익이 1억 원으로 줄기도 하고 적자로 전환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모든 기업의 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금리가 반토막이 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유지된다. 현실에서는 경기가 나빠져도 기업의 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건 흔하지 않지만 1%이던 기준금리가 0.5%로 반토막이 나는 건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러니 경기가 나빠도 금리가 낮아진 효과가 더 커서 주가는 오른다는 설명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금이나 바닷가 토지 등 월세가 안 나오는 자산도 쉽게 오른다. 이자율이 10%일 때 그냥 허허벌판인 바닷가 토지를 사면 그 토지는 매년 10%씩 가격이 올라야 겨우 본전이다. 만약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10%의 손실을 보는 셈이 된다. 그 땅을 살 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10%의 이자가 붙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자율이 0%가 되면 그 바닷가 땅은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금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시중 이자율이 0%이니 보유하고 있더라도 손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 반기를 드는 질문이 하나 있다. “혹시 이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나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실제로 정부가 돈을 계속 시중에 풀어대고 중앙은행도 그걸 계속 도와주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요지는 이렇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죽어가는 기업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죽어가는 기업을 훌륭한 기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나쁜 이유는 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하기 때문인데, 기업이 죽어가다가 살아났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할 기발한 상품을 만들 재주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기는 계속 나쁠 것입니다.” 🍷

글. 이진우(MBC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 내일의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54일간의 역대 최장의 장마가 끝이 나고 폭염이 시작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이 바뀔 것이라고 예견됐지만 다들 현재 영위하고 있는 편안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아 외면하던 진실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사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불가능해지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당사자는 미래세대라 불리는 청년, 청소년들이다. 기성세대는 결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전 세계 정상들이 매년 모여 논의한 기후변화협상의 결과는 감축이 아닌 더 많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었다. 국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미래세대가 당사자성을 깨닫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청년들이 모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2014년에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을 설립했다.

### 더 나은 미래 꿈꿀 수 있도록 목소리 내는 GEYK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은 착하거나 기특한 청년들이 아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기후변화운동이 우리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운동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명 의식 아래 활동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같은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주제 자체가 무척 광범위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와 과학적 사실들을 포함하고



김지윤 공동대표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토크 콘서트, 문화살롱, 게임, 독립서적 등 재밌고 쉽게 풀어내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한다.

두 번째로는 개인 차원의 인식 제고 및 노력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정도의 차이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 기온이 1.5~2℃ 이상 올라갈 경우 지구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는 급변점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인식제고, 교육,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댈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최근엔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정책 참여'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시의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미세먼지 정보 시 서울시 운영의 야외시설 이용료 전액 환불', '친환경사회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금고 평가기준 개정' 등을 제안했다.

올해는 작년에 수용되지 못했던 '친환경사회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금고 평가기준 개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제안했으며,

최종적으로 7월에 발표된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들어가게 됐다. 추가로 '따릉이 안전교육', '자전거둘레길 공모사업', '청년기업-못난이농산물 상생프로젝트' 등을 제안했으며 현재 시민대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15ppm'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유권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인식과 공약이 있는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기후국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됐다.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질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내일을, 미래를 지켜주는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청년 활동을 하며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이른바 'Youth washing'이다. 최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기 저기서 청년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시작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지만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청년들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자리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 🍀

## 불붙은 화성 탐사 경쟁

영화로도 만들어진 SF소설 ‘마션’은 화성에 홀로 조난당한 우주비행사의 생존기를 생생하게 그려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야기 속에서는 이미 인류가 여러 차례 화성에 유인탐사대를 보낸 것으로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누구도 화성 땅을 밟지 못했다. 생명이 없는 탐사선 몇 대만 황량한 땅을 누볐을 뿐.

최근 들어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화성 탐사에 나서고 있다. 그중에는 화성 탐사에 처음 도전하는 나라도 있다. 7월 20일에 화성탐사선 ‘아말’을 발사한 아랍에미리트(UAE)다. 며칠 뒤인 7월 23일에는 중국이 ‘텐원 1호’를 발사했다. 중국은 이번이 두 번째 시도다. 전통의 우주 강국인 미국은 같은 달 30일에 화성탐사로버 ‘퍼시비어런스’를 실은 ‘마스2020’을 발사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달에도 탐사선을 보내보지 못한 처지라 그런지 부러운 마음뿐이다.

### 2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왜 하필 다들 이 시기에 화성탐사선을 앞다투어 발사한 걸까? 지구 주위를 도는 달과 달리 화성은 태양 주위를 돈다. 따라서 지구와의 거리는 공전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지구-화성 순서로 늘어섰을 때가 값고, 화성-태양-지구 순서로 늘어설 때는 멀다. 가장

가까울 때는 지구에서 화성까지 빛의 속도로 4분여가 걸리며, 가장 멀 때는 20분 정도 걸린다.

화성의 공전주기는 687일로, 약 2년에 한 번씩 지구에 가까워진다. 이때 탐사선을 보내면 화성까지 날아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올해 7월 17일에서 8월 15일 사이가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시기다.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화성탐사선을 보낸다면, 그건 2022년이 될 것이다. 그 뒤에는 2024년이 된다. 이와 같이 약 2년마다 화성탐사선을 보내기에 좋은 때가 온다.

화성까지 거리가 가까운 시기를 골라서 보낸다고 해도 탐사선이 화성까지 가는 데는 약 6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이번에 발사한 세 나라의 화성탐사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내년 2월 정도가 된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유인 탐사는 아직 언감생심이다. 만약 유인 탐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왕복 1년에 현지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지금보다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야 한다. 유인 탐사는 고사하고 무인 탐사로도 아직 화성 왕복 여행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 UAE와 중국의 첫 성공 가능할까?

이번에 첫 화성 탐사에 도전하는 아랍에미리트는 아



직 달 탐사선을 보낸 적이 없다. 으레 첫 번째 단계처럼 여겨지는 달을 건너뛰고 곧바로 화성에 도전한 것이다. 일본의 우주발사체 H2A 로켓에 실려 발사된 아말은 성공할 경우 화성 궤도를 돌며 화성의 대기를 분석한다. 대기 중의 오존, 수소, 산소, 수증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관측 장비를 싣고 있다. 아말은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대로 아말이 내년 2월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내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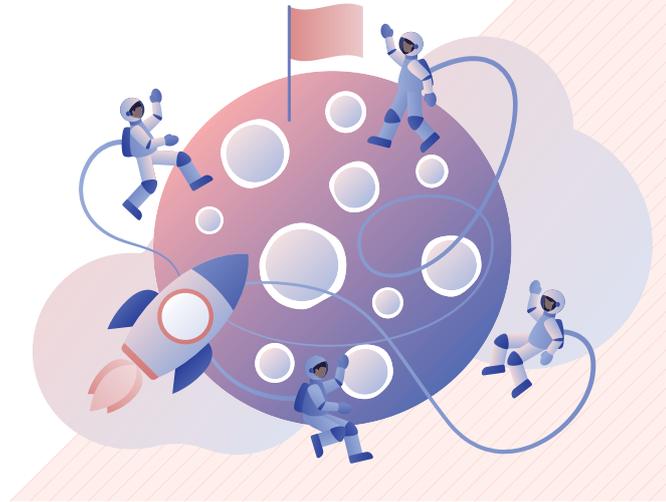
중국은 21세기 들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미 독자적으로 실험용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렸고, 달 탐사에도 열심이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기도 했다. 중국은 2011년에 처음으로 화성 탐사를 시도했다. 러시아와 함께 탐사선을 보냈지만, 그때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다.

궤도선만 보내는 아랍에미리트와 달리 중국은 궤도선과 함께 착륙선도 보낸다. 착륙선에는 화성 표면을 돌아다닐 수 있는 로버가 실려 있다. 로버는 화성의 토양과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관측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약 90일 동안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한다.

### 화성의 흙을 지구로 가져오려면

이미 여러 차례 화성 탐사에 성공한 미국도 다시 탐사선을 보낸다. 2012년에 화성에 착륙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로버 ‘큐리오시티’의 뒤를 잇는 ‘퍼시비어런스’가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탑재하고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원자력 전지로 움직여 장기간 화성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이번 탐사에서는 ‘인제뉴이티’라는 드론에 시선이 간다. 대기가 지구의 0.7%에 불과한 화성에서 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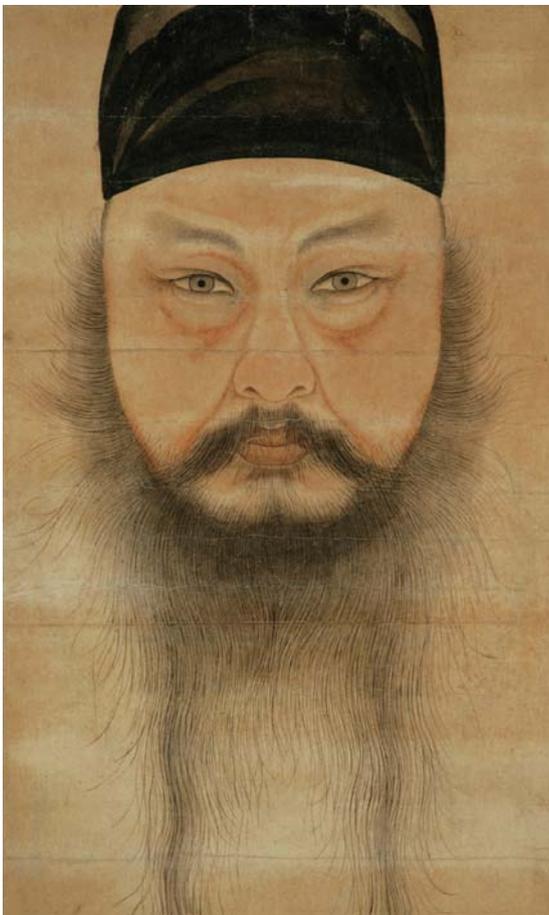
게 만든 무인비행체로, 성공한다면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 최초로 비행체를 날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유인 탐사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다음 단계는 화성 샘플 귀환 계획이다.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따위를 지구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화성 표면에서 이륙해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 만큼 쉬운 리 없다. 훗날 화성 유인 탐사가 이루어진다면, 화성 표면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야 지구 귀환이 가능하다. 역사적인 화성 유인 탐사가 편도 여행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술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세대가 살아서 유인 화성 탐사를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시도가 아주 많이 쌓여야 가능해질 테니 말이다. 이번 에 출발한 화성탐사선이 도착할 내년 2월의 성과가 기대된다. 🍷

글. 고희관(과학칼럼니스트)

## ‘윤두서 자화상’의 비밀



국보 240호 '윤두서 자화상', 18세기초, 해남 녹우당 소장

둥글고 육중한 얼굴, 부리부리한 눈매에 형형한 눈 빛, 한 올 한 올 불타오르는 듯 생동감 넘치는 수염... 보는 이를 압도하는 한 폭의 초상화. 조선시대 최고의 초상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윤두서 자화상’(국보 240호, 18세기 초)이다.

작품 크기는 38×20.5cm.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 자화상은 강렬함을 넘어 무시무시하게 다가온다. 얼굴과 눈빛도 대단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있어야 할 두 귀, 목과 상체가 없다는 사실. 그 뿐인가. 탕건(宕巾)은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탕건이라고 하면 조선 선비의 기본 의관(衣冠)의 하나가 아니던가. 전체적으로 보면, 화폭 위쪽에 얼굴 하나가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그림을 그린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緒, 1668~1715)는 전남 해남 출신이다.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의 증손으로, 해남 윤씨 남인(南人) 집안이었다. 숙종 때인 1693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듬해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인이 서인(西人)에 밀려 권력을 잃자 윤두서는 정치와 관직의 뜻을 버리고 낙향했다.

조선시대 초상화를 두고 흔히 ‘전신사조(傳神寫照)’라고 평가한다. 전신사조는 인물의 겉모습을 그대로



1937년 조선총독부가 '윤두서 자화상'을 촬영한 사진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윤두서 자화상'을 적외선 촬영한 사진

묘사하는 사형(寫形)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까지 그려내는 사심(寫心)을 성취했다는 뜻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윤두서 자화상'은 단연 독보적이다. 사실적인 표현과 얼굴에 가미된 명암법(음영법), 독특한 화면 구성을 통해 작가의 팝진한 내면을 박진감 있게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다.

### 여느 자화상과 다른 '윤두서 자화상'

'윤두서 자화상'은 보면 볼수록 궁금증을 자아낸다. 얼굴과 눈매는 왜 이렇게 부리부리한지(윤두서 얼굴은 원래 무인처럼 매섭게 생겼다고 한다), 왜 목과 귀가 없는 것인지, 탕건은 왜 잘린 채로 그린 것인지. 이 같은 엄청난 파격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에 대해선 그동안 “얼굴과 눈 이외의 것들은 본질적이지 않기에 그리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두서라는 개인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다. 관복, 관모 심지어 귀조차 윤두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견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궁금증은 여전하다. 설령 그것이 윤두서라는 인물의 본질이 아니라고 해도, 조선시대의 유교 윤리나 보편적 미감(美感)서 크게 벗어난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기 때문이다. 사대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일부를 삭제한 채 그림을 그린다는 것, 조선시대 의관의 일부를 잘라낸 채 얼굴을 그린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윤두서는 정말로 본질적이지 않다고 여겼기에 이렇게 그린 것일까.

그러던 중 1996년 놀라운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 자료 속에서 발견되었다. 1937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에서 '윤두서 자화상'을 찍은 사진이 확인된 것이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서 윤두서는 도포를 입고 있다. 옷깃의 선이 보이고 목과 상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사진을 보니 지금 우리가 보는 자화상 실물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이 사진은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러자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누군가는 “원래 유탄(柳炭)으로 그려놓은 옷선이 있었는데 후대에 표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워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누군가는 “옷선은 뒷면에 그린 것(배선법, 背線法)이다. 1937년 촬영한 사진에 배선이 드러난 것은 앞뒤 양쪽에 보조 조명을 주어 찍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던 중 2006년 여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작품을 정밀조사를 하게 되었다. 현미경 검사, X선 투과 촬영, 적외선 촬영, X선 형광분석법 등의 과학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937년 사진에는 옷깃이 선으로만 나타났었는데 이번엔 옷선 주위로 어두운 느낌을 주는 혼염(暈染)표현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얼굴에 비해 너무 작긴 하지만 붉은 선으로 흐릿하게 귀가 그려져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 결과는 또 한 번 이슈가 됐다. 육안으로 옷선은 보이지 않지만 과학분석에 의존하니 옷선이 보인다. 그런데 그 옷선이 앞면에 유탄으로 그렸다가 지워진 흔적인지, 뒷면에 남아있는 옷선인지 단정짓기는 어렵다. 뒷면의 배접을 뜯어내지 않는 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1937년의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를 통해 윤두서가 도포와 귀를 그리려고 했었음이 확실해졌다. 몸통을 앞면에 그렸든 뒷면에 그렸든, 윤두서는 몸통에 채색은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초본(草本) 즉 일종의 밑그림일 수도 있고 미완성작일 수도 있다.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롭지만 한편으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국보 240호 ‘윤두서 자

화상’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옷선이 보이는 사진이 윤두서의 그림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육안으로 옷선이 보이지 않는 그림이 윤두서 그림인가. 복잡하고 오묘해진다. 그래서 더 보는 이를 빨아들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선이 드러난 사진보다 옷선이 보이지 않는 국보 240호 그림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이다.

### 윤두서가 자화상에서 탕건을 잘라낸 이유

‘윤두서 자화상’의 강렬한 눈빛.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어딘지 모르게 우수와 우울함이 느껴진다. 서인 중심의 세상, 남인이 소외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대결, 아쉬움과 저항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윤두서가 자신의 의관에서 탕건을 잘라내고 인물을 화면 위에 배치한 파격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탕건은 관직에 나간 남자들이 망건 위에 쓰는 것이다. 자화상에서 탕건의 일부를 잘랐다는 것은 제도권 관직에 대한 부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해남으로 낙향한 윤두서는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한 심경을 자화상으로 표출했던 것은 아닐까.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윤두서 자화상’은 그 자체로 보는 이를 잡아 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두운 공간에서 저 그림과 맞닥뜨린다면 섬뜩할 것이다. 그 섬뜩함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조선시대 그림 가운데 이런 분위기의 작품이 또 어디 있을까.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 사이시옷(ㅅ) 적기의 요령



한글 맞춤법 제4장 제30항에서는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고유어 합성어나 한자어와 고유어 합성어 중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어근과 어근 사이에 ‘ㅅ’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유어 합성어 중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뒷말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기 어렵다. 그런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면 앞말의 받침에 ‘ㅅ’을 적도록 하고 있다. 가령 꿏바퀴 아래쪽에 붙어 있는 도톰한 살을 ‘꿏밥’이라고 적는 식이다. ‘귀’와 ‘밥’은 고유어 합성어이고 ‘귀’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귀뺨’으로 발음되면 ‘꿏뺨’이라고 적어야 한다. 참고로 ‘귀뺨’을 ‘귀지’로 알고 있는데, ‘꿏구멍 속에 낀 때’는 ‘꿏뺨’이 아니라 ‘귀지’이다.

## 등곶길(○) 뒷일(○)

한자어와 고유어 합성어 중에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뒷말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기 어렵다. 그런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면 앞말의 받침에 ‘ㅅ’을 적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가는 길을 가리켜 ‘등곶길’이라고 적는 식이다. ‘등곶’과 ‘길’은 한자어와 고유어 합성어이고 ‘등곶’은 모음으로 끝나므로 ‘등곶길’로 발음되면 ‘등곶길’이라고 적어야 한다.

고유어 합성어 중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음운 환경에서 ‘ㄴ’ 또는 ‘ㄴㄴ’ 소리가 덧나면 앞말의 받침에 ‘ㅅ’을 적도록 하고 있다. 가령 음력 팔월 보름을 가리켜 ‘가윗날’이라고 적고, 뒤에 일어날 일을 가리켜 ‘뒷일’이라고 적는 식이다. ‘가위’와 ‘날’, ‘뒤’와 ‘일’은 고유어 합성어이고 ‘가위’와 ‘뒤’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가윈날’과 ‘뒤날’로 발음되면 ‘가윗날’과 ‘뒷일’이라고 적어야 한다.

한자어와 고유어 합성어 중에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음운 환경에서 ‘ㄴ’ 또는 ‘ㄴㄴ’ 소리가 덧나면 앞말의 받침에 ‘ㅅ’을 적도록 하고 있다. 가령 계를 하는 날을 ‘젧날’이라고 적고, 흔히 있는 일을 가리켜 ‘예삿일’이라고 적는 식이다. ‘계’와 ‘날’, ‘예사’와 ‘일’은 한자어와 고유어 합성어이고 ‘계’와 ‘예사’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겐날’과 ‘예산날’로 발음되면 ‘젧날’과 ‘예삿일’로 적어야 한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아차산 5보루에서 1보루 쪽을 본 풍경. 사진 가운데 아차산 1보루가 있다.

## 아차산에서 한강 광나루까지 역사의 발자국을 찾아 걷다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아차산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각축장이었다. 아차산 능선 길을 걸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동서남 북으로 트인 시야는 적을 감시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다. 백제에서 고구려, 마지막으로 신라가 아차산의 주인이 됐다. 그 각축의 역사, 전쟁의 현장에 죽음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 고구려 온달장군이 있다. 고구려의 요새 아차산 보루가 남아 있는 아차산 능선 길을 걸어서 광나루가 있던 한강 가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 길 이름이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이다.



## 아차산, 삼국의 각축장이 되다

해발 285.8m인 아차산은 남쪽으로 한강 이남, 북쪽으로 북한산, 서쪽으로 남산 일대, 동쪽으로 경기도 구리시와 강동구 넘어 경기도 일대까지 시야가 트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 평화의 시대에는 통쾌한 전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만 전쟁의 시절에는 그보다 엄혹한 곳이 없었을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두고 각축을 벌이던 시절, 아차산의 주인은 두 번 바뀌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가 고구려에 대비하기 위해 아차산성을 수리했다. 아차산의 첫 주인은 한강 유역에 뿌리를 내린 백제였다.

고구려 19대 왕에 오른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396년에 백제의 아차산성을 함락시켰다. 이후 장수왕 때인 475년 고구려가 한성 백제를 치고 남쪽으로 진출할 무렵 백제의 개로왕은 한강 유역을 두고 벌인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백제는 서둘러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다.

왕도 잃고 영토도 잃은 백제는 훗날 고구려에게 빼앗긴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는다. 그것이 나제동맹이었다. 훗날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나제동맹에 따라 동맹군

을 만들어서 북진한다. 동맹군에 밀린 고구려는 551년 한강 유역을 내주고 한 발 물러서게 된다.

백제와 신라는 한강 유역을 나누어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깨고 백제가 점령한 한강 유역을 빼앗는다. 아차산의 주인이 다시 바뀌는 시기였다.

훗날 고구려의 온달장군은 빼앗긴 한강 유역의 땅과 성을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출사표를 던지고 전쟁에 나섰다. 아차산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의 상이 있다.

## 해맞이 광장에서 전망을 즐기다

아차산 들머리(입구)는 많다. 그중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을 따라 걷기로 했다. 이 길은 광나루역에서 시작해서 아차산 입구(만남의 광장), 고구려정, 해맞이 광장, 아차산 능선의 고구려 보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 상



아차산 입구    고구려정    해맞이 광장    광나루 터

루들, 아차산성, 한강 상부암 석불입상, 광나루 터, 광진교 건너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끝나는 10km 정도 되는 코스인데, 그중 아차산 입구(만남의 광장)에서 광나루 터까지 약 7km를 걸었다.

아차산 능선으로 오르는 길 비스듬하게 기운 절벽 바위 경사면에 만든 인공폭포를 보고 고구려정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다. 산비탈 전체가 한 덩어리의 너럭바위다. 곳곳에 키 작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드는 곳도 있다. 그곳을 다 올라서면 고구려정이 나온다.

고구려정의 기와는 고구려 궁궐인 평양 안학궁 터와 아차산 흥련봉 보루에서 출토된 기와의 붉은 색상과 문양을 고증하여 만들었으며 단청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양을 참고했다고 한다.

고구려정에서 보는 전망은 좋지만 철탑과 전선이 거슬린다. 정자를 뒤로하고 해맞이 광장으로 오른다. 해맞

이 광장에 전망 데크가 세 곳 있다. 데크마다 펼쳐지는 풍경이 다르다.

새천년 해맞이 기념비 앞 전망 데크에 서면 올림픽대교와 잠실철교 뒤로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았다. 대모산, 청계산, 우면산, 관악산 능선이 이어진다. 새천년 해맞이 기념비 위 전망 데크에 서면 서울 남동부 일대를 한 눈에 넣을 수 있다. 그 위에 있는 전망 데크는 시야가 더 좋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를 지난 한강이 서쪽으로 머리를 틀면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앞으로 흐른다. 서울로 굽이치며 밀려오는 한강의 유장한 물길이 아름답다.

### 고구려의 요새, 아차산 능선 길에서 광나루 터까지

해맞이 광장을 뒤로하고 오르막길로 올라간다. 이 길에서 처음 만나는 고구려군의 요새, 아차산 1보루에 올라선다.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섰다. 시야를 가리는 게 하나



해맞이 광장



아차산 5보루에서 본 풍경.  
남산 뒤로 해가 지고 있다.



도 없다.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없어 몸을 움직여 풍경을 보아야 한다.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한강의 물길, 예봉산, 검단산, 예빈산, 남한산(남한산성)까지 눈에 넣고 뒤돌아선다. 이번에는 남산, 안산, 인왕산, 백악산(북악산), 북한산 산줄기를 바라본다. 몸을 돌려 앞으로 가야할 길을 따라 눈길을 옮긴 곳에 아차산 5보루가 보인다.

아차산 5보루에 서면 방금 전에 머물렀던 아차산 1보루가 보인다. 한강과 도심의 풍경이 배경이다. 고도가 높아진 만큼 풍경을 보는 느낌이 달라진다. 반환점인 아차산 4보루로 가는 길은 초원의 오솔길이다. 4보루까지 걷는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아차산을 두고 각축을 벌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4보루에서 왔던 길을 되짚어 걷다가 갈림길에서 아차산성 방향으로 걷는다.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출발했던 만남의 광장이 나오고, 아차산 생

태공원을 지난다. 산에서 내려와 광나루가 있었던 한강에 도착했다. 광진정보도서관 주변에 상부암 석불입상과 광나루 터를 알리는 푯돌이 있다.

1410년 태종은 형이자 조선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정종이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 광나루에 나가 영접하고 잔치를 벌였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과 배를 타고 광나루에 도착한 뒤 광나루 들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기도 했다.

상부암 석불입상은 670년(신라 문무왕 26년)에 의상대사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불상의 옷을 표현한 양식과 불상의 머리가 큰 것으로 보아 고려 초 또는 신라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불상은 강을 오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그곳에 놓여졌다. 불상을 그곳에 놓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상을 통해 발현됐던 것이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 공수처 후속 3법 통과 국회, 첫 수어통역 시작

2020. 8. 1. ~ 8. 31.

- 4**
  -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을 위한 후속 법안 3건 의결
  - 7월 임시국회 마무리

---

- 5**
  - 집중호우로 3년 만에 소양강댐 수문 개방
  -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확정고시
  - 군, 세계 최대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

- 6**
  - 여야 지도부, 수해지역 방문해 피해상황 점검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 7**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직속 수석 전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에 경제회복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위 구성 제안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위 구성 제안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국 전공의 집단 파업

---

- 10**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 제청
  - 국회,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시작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 내정
  - 더불어민주당,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논의
  - 행정안전위원회, 화상 현안보고 개최…집중호우 피해복구 대책마련 논의

---

- 12**
  - 미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자 여성, 아시아계 해리스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

---

- 13**
  - 전북 남원과 경남 하동군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 15**
  -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열려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 16**
  - 중앙사고수습본부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코로나19 감염 확산 책임’으로 고발
  - 교육부, 수도권 지역 학교 등교 인원을 재학생의 1/3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학은 비대면 수업 권고

---

- 17**
  - 방역당국, ‘서울·경기 지역주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 준수’ 호소

---

- 18**
  - 8월 임시국회 시작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열려

---

- 19**
  -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경찰, 역학조사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

- 20**
  - 여야, 9월 정기국회 개최 합의…윤리특위 등 5개 특위 설치하기로
  -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676명…전국 코로나19 확산세

---

- 21**
  - 문재인 대통령, 일부 교회에서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주말 넘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시 3단계 격상 검토”
  - 더불어민주당,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 예비군 훈련 역대 최초 전면 취소

---

- 24**
  - 정부,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서울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

- 25**
  - 수도권 유치원·초·중고 원격수업 전환…고3은 등교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재확산,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일상 정지되고 경제타격, 일자리 무너져”
  - 정세균 총리, ‘광화문 집회’ 허가한 재판부 비판

---

- 26**
  - 정부,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

---

- 27**
  -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주요건물 전면 폐쇄하고 일정 중단

정리. 윤성혜



## 대한민국 의정 종합채널 NATV가 만듭니다

### 300인의 희망인터뷰

월~금 오후 1시 20분 / 1시 50분 방송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인생관과 정치관,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등을  
소개하는 고품격 프로그램



### 국회의원 25시

월요일 오전 9시 15분 방송

의정활동부터 인간적 면모까지  
밀착 취재를 통해  
국회의원의 25시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휴먼 다큐멘터리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http://www.natv.go.kr)

